

# ‘늘봄학교’ 추진 속도... 학교현장 “인력·재정 태부족” 냉랭

교육·돌봄 의지엔 공감대 형성  
미흡한 인력·재정 우려 목소리  
2025년 전면 도입까지 확대돼야  
전교조 “충분한 논의·협의 필요”

교육 당국이 돌봄 확대 등을 포함한 ‘늘봄학교’ 추진 방안을 발표했지만 현장에서는 실효성을 지적하며 반발에 나섰다. 교육계에서는 교육·돌봄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의지에는 동의하지만 현장과의 합의가 부족한 정책이라는 평가가 우세하다.

12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가 9일 내놓은 ‘국가 교육·돌봄 책임 강화를 위한 늘봄학교 추진 방안(늘봄학교 추진 방안)’에는 아침 7시 돌봄부터 저녁 8시까지 돌봄시간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으며, 초등학생 방과 후 활동 지원을 통해 교육과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자 했다.

늘봄학교는 2023년 4개 지역 내의 200개 학교에 시범 운영해 2025년까지 전면 도입하게 된다. 다만 현장에서 방과 후 학교로 인한 업무 가중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기 때문에 원만한 합의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현장에서는 ‘늘봄학교’ 추진에 있어 인력·재정지원 미흡해 학교에 떠넘기기라는 우려가 나온다.



울산지역 초등학교 신입생 예비소집일인 지난 3일 오전 울산 중구 울산초등학교 가입학식에서 예비 초등학생과 학부모들이 돌봄교실을 신청하고 있다. /뉴스시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입장문을 통해 “늘봄학교 추진 의지와 역량이 높은 시도교육청을 시범교육청으로 1월 중순부터 공모해 집중 지원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당장 3월부터 해당 프로그램 적용이 가능한 교육(지원)청과 학교가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라며 “신입생 학부모 대상 제도 홍보의 경우도 촉박한 일정으로 인해 결국 학교가 상당 부분을 떠맡아야 할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교원 업무 경감 방안으로 기존의 시도교육청 방과후학교지원센터를 방과후·늘봄지원센터로 개편하

고, 시도교육청 공무원 120명을 2023년 단위학교의 늘봄학교 업무를 지원할 방과후·늘봄지원센터의 전담인력으로 재배치하겠다고 발표했다. 지역사회 연계·협력도 강화하면서 시도교육청과 지자체가 인력, 프로그램, 예산 등의 지원 공유도 가능하다.

다만 현장의 반응은 냉랭하다. 교총은 “현행보다는 개선된 방안이지만, 교원들이 온전히 수업과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근원적인 행정업무 경감방안으로는 미흡하기 때문에 현장 수용 가능성은 회의적일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좋은교사 운동도 “늘봄학교가 전국으로 확산되는 2025년까지 꾸준한 재정과 인력 확보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3% 학교의 초기 성공 사례를 만들기 위해 인력과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향후 단계적 확산 과정에서도 이에 상응하는 인력과 재정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교육부가 시범 운영하겠다고 한 4개 지역 내의 200개 학교는 전국 초등학교의 약 3%에 해당한다. 이번 예산이 3%

학교의 초기 성공 사례를 위한 지원이라면 2025년까지 전면 도입되는 과정에서 규모에 걸맞는 재정 확대가 이뤄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돌봄 정책의 확대가 시사될 때마다 교육 당국과 현장의 괴리감으로 인한 잡음이 꾸준하다. 이번 시범 운영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자들의 합의점을 찾아 지속 가능한 정책 구도가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돌봄 확대에 따른 인력 충원도 세심하게 검토돼야 할 사항이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경우 별도 봉사자를 위촉해 학교 자율로 운영하게끔 하고 있지만 지원자가 별로 없는 상황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늘봄학교 추진은 학부모의 돌봄 수요를 넘어 ‘학생이 무엇을 배울 것인지’, ‘학교와 교사의 부담 해소방안은 있는지’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협의가 필요한 정책”이라며 “구체적인 전망을 제시하지 못한 채 ‘확대’ 입장만 내세운다면, 아이들을 밤늦게까지 학교에 가둬두는 꼴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 실직·폐업 ‘서울형 긴급복지’ 129억 투입

서울시, 일시적 위기 가구 지원  
지원대상 확대하고 지급액 상향

서울시는 실직, 질병, 휴·폐업, 사고 등 위기 상황으로 생계 곤란을 겪는 주민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서울형 긴급복지’에 총 129억원을 투입한다고 13일 밝혔다.

서울형 긴급복지는 사고나 실직, 휴·폐업 같이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가구에 시가 생계비·의료비·주거비 등을 지원

원하는 제도다. 시는 올해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소득 기준을 기존 중위소득 85% 이하에서 100% 이하로 조정했고, 재산 기준도 3억1000만원 이하에서 4억900만원 이하로 완화했다.

생계비 지급액도 상향 조정했다. 작년까지는 1인 가구 30만원, 2인 가구 50만원, 3인 가구 70만원, 4인 이상은 100만원이었으나 올해부터는 긴급복지지원법의 생계지원 단가를 적용해 최소 62만3300원에서 가구원

수에 따라 늘어나는 구조로 변경했다. 의료비와 주거비는 종전과 같이 가구원 수 구분 없이 각각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희망자는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나 자치구 방문을 통해 상시 신청할 수 있다. 다산콜센터와 자치구별 복지상담센터를 통한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복지포털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김현정 기자 hjk1@

## 성신여대, 창의적 여성발명인 육성 나서

한국여성발명협회와 업무협약

성신여자대학교가 한국여성발명협회와 ‘창의적 여성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여성 발명·창업인 발굴, 육성과 여성기업인 활동 지원을 위한 정보 교환 및 공동사업 추진 ▲여성 대학(원)생의 지식재산권 지식 함양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학생 및 여성 발명·기업인 간 상호 정보 교류 및 산학협력 연구역량 확보



(왼쪽부터) 김순선 한국여성발명협회 회장, 이성근 성신여자대학교 총장이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성신여대

▲스타트업 및 여성 벤처기업 육성 등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신하은 기자

## 서울시 ‘제2핀테크랩’ 개관

서울시는 디지털 금융 산업의 핵심 기술인 ‘핀테크’와 ‘블록체인’ 분야의 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위해 이달 13일 마포구에 제2서울핀테크랩(제2핀테크랩)을 개관한다고 12일 밝혔다.

여의도에 위치한 서울핀테크랩에 이어 두번째로 문을 여는 제2핀테크랩은 디지털금융 스타트업 지원기관으로 운영된다. 제2핀테크랩은 경찰공제회 자람빌딩(도화동 566) 8층과 11층에 2014㎡ 규모로 조성됐다. 시는 제2핀테크랩은 창업 3년 이내의 기업을 위한 차별화된 지원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시는 작년 12월 공개모집을 통해 입주기업 21곳과 멤버십 기업 16곳 등 총 37개사의 유망 스타트업을 선발했다.

시는 제2핀테크랩 입주기업에 ▲경영컨설팅, 투자·마케팅, 법률자문, 홍보 등 핀테크·블록체인 분야 초기 창업기업 맞춤형 프로그램 ▲저렴한 임대료의 사무실 공간 ▲핀테크·블록체인 분야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 /김현정 기자

## 교육부, 학생맞춤통합지원 역량 강화

교육청·교육지원청 대상 연수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2023년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17개 시도교육청 및 19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 온라인 리모트에서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한다.

교육부는 국정과제인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를 실현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28일, 사회관계장관 회의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현행 사업별 분절적인 학생지원 시스템을 ‘조기 발굴-맞춤형 지원-지역 및 정보 연계’를 통해 모든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위한 학생 맞춤형 지원 플랫폼 체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2023년 상반기부터 9개 시도교육청, 23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농어촌학교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을 신규로 실시해 지역별 편차 해소를 통한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도 추진할 예정이다. /신하은 기자

이번 시범연수는 3월부터 운영 예정인 학생맞춤통합지원 시범교육지원청의 학생 중심 통합지원 역량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17개 시도교육청 과장, 팀장 및 시범교육지원청 운영을 희망하는 19개 교육지원청의 교육장, 과장, 담당자 등 10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1일 차에는 ‘학생맞춤통합지원의 필요성 및 체계 구축 방안’에 대한 특강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학교 내 복합적 위기 요인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2017년부터 추진해 온 학교 내 ‘한디거넵’ 운영 사례를 발표한다. 이후, 교육지원청이 통합지원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실제 사례를 가공해 학교가 교육지원청으로도움이 필요한 학생에 대한 지원을 의뢰하는 상황을 제시하고 교육지원청이 이를 지원하는 문제해결형 체험 연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2일 차에는 시도교육청과 시범교육지원청이 함께 2023년 상반기 시범교육지원청 운영계획 및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신하은 기자

## 인천 검단·청라연장선 전동차 디자인 확정

인천시, 시민 선호도 조사 바탕으로 선정  
검단연장선 외관, 안정·속도감 표현

인천시는 인천1호선 검단연장선 및 서울7호선 청라국제도시연장선의 전동차 디자인을 최종 확정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14일부터 15일까지 인천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동차 디자인 선호도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앞서 인천도시철도건설본부는 일부 역사에서 시행하던 기존 시민 선호도 조사 방법을 탈피해 인천1호선 전구간과 서울7호선 인천구간의 승강장 및 전동차에 직접 탑승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했고, 인천시민 총 8141명이 참여했다.

최종 확정된 검단연장선 전동차의 외관 디자인은 시각적인 안정감과 속도감을 표현하는 동시에 실내는 부드러운 곡선과 심플함을 추구했다. 바닥은 인천1호선 노선컬러를 적용해 이용객에게 직관적인 정보제공을 할 수 있도록 디자인 됐다. 아울러 청라국제



인천1호선 검단연장선 전동차 조감도. /인천시

도시연장선 전동차는 외관은 강렬하면서도 도시적인 세련미를 강조했고, 실내는 사다리꼴 구조의 단단한 무게중심감을 느낄 수 있도록 디자인 됐다. 이번에 제작되는 전동차들은 이용객 편의를 위해 기존보다 넓은 광폭의자가 적용되며, 객실간 통로는 오픈형태로 제작돼 이동이 편리해진다.

최태안 인천시 도시철도건설본부장은 “지하철 이용객들의 선호도 조사를 거쳐 인천시민이 가장 선호하는 디자인으로 최종 선정했다”고 말했다.

/인천=김대의 기자 dykimi@